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부활

李 鐘 允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장)

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 하에 놓이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던 개념의 하나가, 이른바 高비용 低능률 구조이다. 高비용 低능률 구조란 임금 및 지대 등 생산요소 가격이 그 생산성 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의 상품경쟁력은 극히 약화된다. 한국경제의 경우 IMF관리체제 하에 놓인 직후 기업의 대량 도산 및 그에 따른 대량실업이 나타나는 등 한국경제가 심각한 불황 국면으로 빠져들자 이자율을 제외한 임금, 지대가 급락하는, 말하자면 각 생산성에 비해 요소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국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함으로써, 활발한 수출증가를 실현하여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던 것이 수출증대에 뒤이어 내수가 회복되고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설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자,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대도 크게 높아졌으며 또 정책적으로 억눌려 왔던 이자율도 상승하기 시작하는 등 高비용 低능률 구조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高비용 低능률 구조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금년까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분석가들의 공통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의 증대, 외채의 누적에 뒤이어 나타나는 IMF 구제금융의 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한 한국경제로서는 어떻게 하던지 이러한 사태의 진행은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빠른 진행을 막는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수립과 관련해서는 먼저 한 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왜 高비용 低능률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출현은 대체로 개방형 후발국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동반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발국의 기본적인 특징은 근대화된 산업부문에서 종사할 수 있는 有資格 인적자본이 사회적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며 또한 자본축적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가령 1970년대의 한국은 섬유, 잡화류 등 경공업류의 산업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주도로 그 시점의 기술흡수 능력보다 더욱 고도화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및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국내 대체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경제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고급기술·경영인력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심각한 초과수요 현상은 인적자본의 임금수준을 그들의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급등시켰다. 그리고 자본축적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규모 투자 유도는 외자를 크게 끌어들이긴 했지만, 자본의 초과수요를 야기시켜 이자율을 높이고 이에 따라 다른 경쟁국에 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극도로 높였다. 또한 왕성한 투자활동은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킴으로써 지대도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가 고도화된 산업인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자 생산요소 가격이 그 생산성 이상으로 급등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高비용 低능률 구조가 조성된 것이다.**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상태의 조성은 바로 대외경쟁력의 급속한 약화로 이어져 수출을 급락시켰으며, 수출의 급락은 한국경제로 하여금 심각한 불황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1970년대 후기부터 1980년대 중기에 걸친 한국경제의 심각한 불황은 바로 이러한 메카니즘의 작용에 의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기부터 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가는 1997년 말 까지, 이른바 재벌들이 중심이 되어 정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활동이 감행되자 바로 高비용 低능률 구조가 빠르게 진행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조성은 경상수지 적자의 급증으로 연결되고 급기야는 한국경제로 하여금 IMF 관리체제로 들어감과 동시에 심각한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게 한 것이다.**

일본경제는 한국보다 앞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도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은 경제발전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시현했었다. 그러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전환점으로 하여 低비용 高능률 구조를 정착시킨 후,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경제가 어떻게 高비용 低능률 구조로부터 低비용 高능**

를 구조로 전환되어 갔는가를 기술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1930년대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에 전 생산요소를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부문, 경영부문 및 숙련부문 등 제반 형태의 인력들은 학습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술, 숙련 및 경영력을 축적해 간 것이다. 그런데 패전과 더불어 일본경제는 크게 파괴되고 이에 따라 GNP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당연한 결과로서 임금수준도 크게 하락한 것이다. 그들의 잠재적 노동생산성은 2차대전 전이나 다를 바 없는데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인건비 면에서 저비용 고능률 구조가 조성된 것이다. 산업시설의 대대적인 파괴로 인해 지대도 크게 하락했으며, 정책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저이자율이 유지되어 전체적으로 저비용 고능률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은행의 창구규제를 통해 소비성 자금수요를 적극 억제하는 등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함으로써 저이자율을 유지하게 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임금의 인상률을 노동생산성 상승률 이하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중에 기술·숙련·경영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 종신고용, 연공서열 및 기업 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른바 「일본적 경영」이 유효하게 작용함으로써 임금인상을 노동생산성 상승률 이하로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적 경영」의 작용이 뜻하는 의미를 음미해 보면 무엇보다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보장을 우선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임금격차의 발생을 억제시킴으로써 가능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 한 것이다.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 한 또 하나의 주요한 측면은 불로소득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것이다. 아무튼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평등사회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추구를 자제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도 캐칭-업(catching up)을 완료한 이후 캐칭-업 시대에 적합하던 제반 발전구조, 가령 일본적 경영조차도 지금은 파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既述한 측면이 일본경제로 하여금 저비용 고능률 구조를 정착시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경제에서 부활되고 있는 고비용 저능률 구조의

발생을 억제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할 정도로 큰 폭의 임금인상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크게 악화된 분배구조의 왜곡을 조세정책 등을 통해 적절히 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라는 과격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약화시켜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치성 소비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박탈감을 일으켜 과격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동체의 공존적 차원에서 적절히 자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특히 이들 부문에서 전체적인 임금인상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 집중하여 **대대적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임금인상을 선도하는 부문의 임금인상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대응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문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의 조달방법은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부와 소득을 오히려 증가시킨 계층의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과하여 염출하는 방법을 택하면 재원확보도 용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高비용 低능력 구조의 부활은 제2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재연을 방지하여 한국경제로 하여금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급속하게 부와 소득을 증가시킨 계층에 추가적인 적정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여 이 재원으로 高비용 低능력을 야기시키는 애로부문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저자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69)

일본 一橋大 경제학 석사 (1979), 경제학 박사 (1984)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 교수 (1984~현재)

일본 상지대 객원교수 (1992~현재)

한국외국어대 기획조정처장 (1994~96)

한일경상학회 회장 (1996~98)

한국외국어대 세계경영대학원장 (1999~현재)

산업자원부 정책자문위원 (2000~현재)